

지역대학 육성의 방향과 과제 -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

최 성 해 | 동양대학교 총장

I. 들어가는 말

1970년 이후 지역간 불균형 완화라는 과제가 대두된 이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지방경제는 더욱 위축되었다. 수도권은 일자리 경쟁배수(신규 구직자 수/신규 구인자 수)가 1.9인데 반하여 지방은 3.5에 달한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전체의 51.3%를 차지했던 수도권의 총량 경제력은 2000년에 52.6%로 상승하였고, 지방은 47%로 하락하여 경제력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총량 경제력은 증가하고, 다른 지역은 감소했는데 구체적으로 영남은 27%, 호남은 8%로 지역격차도 심화되어 수도권 경제의 광역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조선일보, 2001. 11. 23). 2002년에는 수도권 인구유입이 12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02. 5. 30).

그 동안 정부는 대학생의 정원도 통제하고, 공장의 건설도 제한하였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60조가 지방에 투자되었지만, 지방은 지속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세계에서 사회간접자본이 가장 잘 확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

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위기를 국가 위기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왜 지방대학의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각종 제도나 조치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논하기에 앞서 다음의 두 가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대학 스스로 지방대학의 발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스스로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스스로 유연성(flexibility)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지방대학 문제는 반드시 외부환경적인 요소가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둘째, 고등교육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든지 완전히 중립적이긴 어렵고 지방대학의 생존과 육성이란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지방대학 육성의 긍정적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지방대학 육성의 부정적 요인)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플러스 요인을 아무리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마이너스 요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정책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지방대학 육성은 지자체와의 연계, 지역산업연관 등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미래 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양산업이나 장기적 전망이 어두운 산업에다 학생과 학교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봉책이고, 결국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쉽게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상당수의 대학과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에 대한 관계도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지역 업체-지역대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될 때 역량이 고도화되는데 현재로 보서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요원하고 상호간의 이해가 달라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경우는 경직성의 문제, 지역 업체는 사양화의 문제, 지역대학은 실무적인 역량의 한계 등의 문제가 원활한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의 육성이 도달해 가야 할 목표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 집중화로 인하여 형성된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를 시스템화 또는 네트워크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대학의 생존과 육성의 두 가지 요소, 즉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지방대학 자체를 위협하는 다른 요소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플러스 요인 100이 투입되었을 때 외형적으로는 큰 수치일수는 있지만 이를 상쇄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이 300이면 결국 총지수는 마이너스 200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것이다. 결국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플러스 요인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육성은 플러스 요인의 투입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요인만 줄인다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이 부정적 요소가 이미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로 구축되어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이제는 각종 미사여구(美辭麗句)나 원론적인 접근은 중단해야 할 시점이다. 현실을 무시한 각종의 정책 제시는 그만두고, 실령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해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II. 지방 사립대학 육성방향과 과제

1.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된 문제 영역

그 동안 제시되어 온 지방대학의 육성과 관련한 문제 영역은 다음과 같다(김운희, 2000).

- ① 교육정책 영역 : 입시제도, 정원정책, 재정지원 등
- ② 법·제도적 영역 : 수도권 정책, 대학설립, 조세 문제 등
- ③ 비대도시권 대학들의 내부적인 경영 영역(공

“

고등교육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든지 지방대학의 생존과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플러스 요인을 아무리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마이너스 요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정책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등 영역 포함)

④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영역(특성화, 정 보화를 포함).

⑤ 국가의 균형 발전 및 환경연구 영역

이 가운데서 어느 항목이 지방대학 육성에 절대 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에 걸쳐서 플러스적 요인과 마이너스적 요인이 동 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 교육정책과 재정지원 문제, 특성화 영역이 가장 민감하고 직접 적인 사안이다.

2. 지방 사립대학 육성의 방향

지방대학, 그 중에서도 사립대학의 육성을 논의하 기에 앞서서 지방사립대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 만연해 있다. 사립대학의 육성을 사학재단의 육 성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립대학과 관련 하여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학은 그동안 우 리나라 고등교육을 굳건하게 이어 왔고, 이 인적자 원들이 경제 기적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 세계 교육 개혁의 동향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경향의 하나로 교육의 민영화 (Privatization of Education) 추세를 들 수가 있

다. 여기에는 크게 ① 국립대의 재정지원금의 고갈 과 취업의 열세, ② 교육적 이념이 다른 다양한 사 회집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증가 등의 이유가 있다. 이것은 사립대학의 유연성 이 발휘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말이다.

OECD DB 2000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립대가 주축이 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국립대 의 비율을 보면, 호주, 캐나다, 독일, 스리랑카는 100%, 뉴질랜드, 터키, 오스트리아는 97%, 아일 랜드, 말레이시아는 90%, 미국은 68.9%이다. 그 런데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75.7%, 국립대가 24.3%이다. 이는 우리 고등교육체제가 사립대를 주축으로 한 것이어서 무분별하게 대학정책을 운용 했을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유연성을 전제로 하는 사립대가 주축인 우리나 라에서 사립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고 등교육 전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저 하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사립대는 유연성을 특 징으로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유연성의 결여는 교육 재정의 확보와 학생 정원 확보 문제(미충원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대학경영의 경직화현상 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재정위기의 극복방안

우리 사학의 재정은 ① 국고 지원의 미흡, ② 중단 전입금의 빈약, ③ 학생 부담 의존도 과중, ④ 인건비 위주의 교육비 지출 구조, ⑤ 국·공립과 사립간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 심화, ⑥ 국·공립과 사학간의 법적 차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학 재원의 확보 방안으로는 ㉠ 사학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 ⑤ 사학의 자체적인 재원 확충 등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미국의 CC(Community College)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적 연구, ②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생들에 대한 유자 제도의 활성화, ③ 기업체의 지방대학 기부금의 활성화, ④ 대학 수익 사업의 활성화 모색, ⑤ Voucher System의 고등교육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등 다각적인 시도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① 대학의 자체발전 계획을 지원하여 자생역량 강화, ② 권역 내에 있는 대학간 교류 협력 체제의 구축과 활성화, ③ 지역 산업과 문화를 연계한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 유도, ④ 학생 모집이 현저히 곤란한 대학의 조기 퇴출, ⑤ 지방대학 학생과 교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 경쟁 구조의 마련 등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① 획기적인 재정 지원, ②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 확대, ③ 지방대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④ 기숙사 확충을 포함한 학생 유인 방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⑤ 지방대학생들에 대한 합리적 장학금 지원 방안, ⑥ 미충원에 따른 대학수입의 보전을 위한 교수 임금에 대한 지원제도, ⑦ 지방대학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⑧ 수도권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행정수도의 이전, ⑨ 지역대학생들에 대한 우대정책, ⑩ 지역대학들에 대한 매칭펀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다각적인

정책을 권고해야 한다.

위의 항목 중 매칭펀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것은,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응자금의 조성을 면제하여 대학이 보다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보류 중인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쳐서 정부가 지원 가능한 액수로 조정한 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참고로 신정부는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신하여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 권역별 영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 학생지원 확보 문제

지방대학에 대한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과 같은 플러스 요인을 상쇄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지방사립대의 육성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마이너스 요인은 학생 미충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무리 좋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학생들이 없다면 대학은 의미가 없다. 일부에서는 지방사립대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학생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원정책의 실패 때문에 학생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정원은 다양한 형태의 누수(漏水) 현상이 일어나 지방대학이 생존하기 힘든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대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사회교육원이 활성화됨으로써 대학정원의 누수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교육원은 그 내부에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일정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므로 대학으로 갈 인력들이 사회교육원에 안주하여 질적 관리가 되지 않은 교육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한 효

지방대학에 대한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과 같은 플러스 요인을 상쇄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과를 가지게 되었다. 사회교육원은 원래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20~30대가 84.9%로 사실상 대학입학 연령 대상자가 다니고 있다.

둘째, 재학생 학점은행제가 확대됨으로써 학생들의 '사실상 편입'이 용이해져서 정원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방대학을 중퇴하고 그 학점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입학이 쉬운 사회교육원으로 들어가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다(일반적인 경우 105학점 이상). 현재 각 대학의 교정이나 심지어 강의실 게시판에 까지 각종 편입에 대한 광고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학에서 학점당 가격이 4만~8.6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 텅텅은 물론 과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현재 입법 예고된 것으로 우수기술학원도 앞으로는 전문학사를 수여할 수 있으므로 정원 누수는 가속화될 것이다. 물론 아주 시설이 양호하고 강사진이 우수한 학원이 학위를 주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40인 기준, 자본금 1억, 행정실 260㎡, 실습실(16×16m) 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지속성이나 질적 관리는 물론 사회적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문제는 다시 검

토되어야 한다.

넷째, 사이버 대학의 경우도 2003년 현재 16개 대학 신입생이 23,580명으로 가하급수적으로 정원이 증가하여 정원 누수를 부채질하고 있다. 즉, 사이버 대학의 정원은 6220명(2000), 16,800명(2001), 23,800명(2002) 등으로 증가하여 2000년을 100으로 하면 2001년 270, 2002년 382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이버 대학의 정원의 증가는 디지털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주요정책의 일부이겠지만 지난 해 모 사이버 대학의 시험부정에 경찰이 개입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사이버 대학의 신설과 사이버 대학의 정원 확대보다는 좀더 질 관리가 가능한 구조에서 정원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내 대학(종업원 200인 이상)도 정원 누수의 원인이 된다. 훌륭하고 건실한 기업들이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대학 설립을 완화하는 조치이므로 대학 정원 누수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01년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사내 대학원을 설립하고 대학총장 명의로 석·박사를 수여하기로 한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인한 사내 정규대학도 정식 출범하였다. 예를 들면 S대와 S전자가 공동으로 총 5개의 대학원 과정으로 S공과대학원을 개교하였고(2001.3), S전자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우수 직원 35명이 학생으로 선발되기

도 하였다.

여섯째, 대학설립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그 의도와는 달리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막지 못함으로써 오늘의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하였다.

일곱째, 지방 국립대학들은 기초학문 육성, 이공계 및 대학원 육성 등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지방의 우수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긴 채 낮은 등록금으로 지방 사립대학과 경쟁함으로써 지방대학간의 과도한 경쟁상태를 초래하고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즉 지방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양적 경쟁에 치중한 결과 과도한 입학정원을 보유하여 중하위권 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덟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역할분담과 그 영역이 혼란해짐으로써 대학교 정원과 전문대학의 정원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식적이고 무분별한 정책이 그 원인이었다.

이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①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② 각 부서별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 ③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조정능력 부재 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④ 지나친 대학서열화로 인한 학생들의 업그레이드 심리와, ⑤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원리라는 미명하에 교육의 완전경쟁 상태에서 지역과 규모, 국립과 사립 등 대학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원 운영, 평생교육, 원격교육, 산업체 근로자 교육 등에 나서는 등 대학 간 역할 평준화가 심화됨으로써 특성화를 이루리 살린다 해도 그 결실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극심하게 왜곡된 고등교육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재고하고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 각종 대학설립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립-사립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분담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대학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교육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교육부는 인식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② 대학입학정원의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행 대학 입시제도를 보면 각 군으로 나누어진 입학원서 접수시 대학 선택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합격 후 등록은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생하는 정원미달의 문제는 정원조정과 추가 모집제도로 해결해야 한다. 2003년도 입시에서 비수도권 지역 등 미달사태에 직면한 지역대학들이 합격자 전원 등록금 감면을 내세우는 등 학생모집을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함으로써 대학이 체감하는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이를 위하여 대학간 통합을 통해 교원확보, 교사확보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프로젝트 중심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꾀함으로써 위기극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학정원 누수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① 모든 대학들이 정원의 일정 비율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문대의 경우 정원의 10% 감축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즉 전국 대학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하도록 하여 은행식 정원관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부구욱, 2002). 그리고 ② 상위권 대학은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연구(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야 하고, ③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기초학문, 이공계 등 학문 분야에 주력하고 정원을 축소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립대학들이 추

“

이제부터라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다 유연한 특성화 정책 실시하여야 한다.

즉 지방대학들은 자기의 여건에 맞고 사회적인 수요가 큰 것을

하나씩 집아서 생존의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구하는 실용학문과 차별화해야 한다. 나아가 ④ 대규모 사립대학들은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오히려 입학정원을 축소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축소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정부는 ①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② 지방대학이 학생을 안정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조정 작업을 하거나, ③ 사회적·제도적으로도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학 자체적으로도 구조 조정과 같은 현실적인 과제의 해결에 노력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분류하여 보면, ① 편중된 교육 정책의 재조정, ② 교육인적자원부 정원 정책의 감시 체계의 구성, ③ 개발 지역의 기지로서 대학 기능 강화, ④ 특성화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의 연구 및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비대도시권 대학의 역할 강화, ⑤ 재정지원 및 세법체계의 개선, ⑥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⑦ 지방의 현실을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지방대학 협의체의 구성 등(김운희, 2000)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인재할당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종 자격고시를 권역별로 행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사법시험이나 의사,

약사 등의 자격시험을 권역별로 행하게 하여 그 권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 근무자에 대한 승진점수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지방대학 특성화 문제

그 동안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은 '특성화', '구조조정' 이었고, 이것이 마치 만병통치의 비방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일관되게 지역산업과 문화를 연계한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그 동안 추진된 각종의 산학연을 살펴보면 지방대학 특히 50여개 이상의 비대도시권 지방대학에서는 실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프로젝트를 많이 수용하면 좋겠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이 기업과 연계하기가 힘들다. 부산·대구·대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산학협동을 하기 어려운데 무조건 지방대학들은 산학연계를 등한시하고 그래서 발전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다.

대학은 특성화를 통하여 산학연 체제를 구성할 수 있지만 지역산업 자체가 붕괴된 상태에서 지방대학의 선택의 폭은 매우 협소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특성화 사업의 최고 수혜자들은 수도권 지역 일 뿐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은 첨단 산업에서

부터 전통산업, 심지어 농업까지 그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특성화도 가능하고 그 변경도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사양산업이나 특정산업에 치우치거나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소규모 기업들이 주축인 경우가 대부분인 지방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특성화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의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남발하여 대학의 위기를 자초한 전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들을 더욱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다 유연한 특성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지방대학들은 자기의 여건에 맞고 사회적인 수요가 큰 것을 하나씩 잡아서 생존의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연계할 만한 지역산업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실인식이 부족한 소치이다.

지방대학들은 시너지효과가 큰 특성화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대전대학교의 군사학과와 같이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지방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성기태, 2003)은 지방대학육성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지방대학 학문분야의 특성화를 위하여 전문대학원을 지방에만 신설하는 방안으로 소위 인기 학과인 의학, 한의학, 법률 및 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전문 대학원과 같은 전문대학원을 지방대학에 신설한다면 우수 인력의 지방 분산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성기태, 2003). 이러한 지원도 학부정원의 축소와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대학의 자체적인 변화 모색

지방대학의 발전은 사회적 수요나 산학협동과 관련된 특정 학부나 학과가 대학 구조를 얼마나 창

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K대학은 1997년 사회과학 - 공학 - 예술 3개 계열을 해체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단과대학인 멀티미디어대학을 국내 처음으로 출범시켜 멀티미디어 프로젝션을 자체 설립, 학생들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있다. 이것은 '세계 유일(World Only)'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① '지역대학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산학연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 ② 주요 권역별 대학 단지를 개발하는 방안, ③ 인기 전문대학원의 지방설치, ④ 연합대학(University System) 등도 검토할 만한 과제이다. 연합대학이란 미국 정치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있듯이 연합체의 중앙 행정부서가 있고 개별대학이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인데, 현재 우리 실정에 맞지 않지만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은 대학 스스로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어, 컴퓨터, 한자, 전공실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수업을 30% 이상은 영어로 진행하고 회사와 유사하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의 엔지니어들이 대학교육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 교수 요원들이 현장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당장에 개선하기는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의 보완책을 통하여 적용시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하는데, ① 프로젝트매니저(PM)가 직접 교육하거나, ② 학생들이 OJT 과정을 수료할 경우 학점으로 대신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수가 일반적으로 push하는 형태의 교과과정에서 탈피하여 사전부터 산업동향 및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분석한 뒤, ① 직무분석, ② 설문을 통한 직무분석 검증, ③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와 이에 필요한 기술의 상관관계

“

극심하게 왜곡된 고등교육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정원 정책을 재고하고,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재조정하며,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 각종 대학설립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

를 나타내는 흐름도를 작성하고, ④ 흐름도에 따른 우선 순위(priority)를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실무적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제 중심의 집중 교육인 프로젝트(Project) 교육과 타겟(Target) 교육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 같은 교육방식은 공대 대학원 과정이나 일부 전문대에서 수행되어 오는 형태들인데, 이것을 대학교 학부과정과도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교수들의 많은 반발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상호 지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즉 지방대학 - 지자체 - 지역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방기업들과 지금까지 보다 더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지역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Ⅲ. 맺는 말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문제는 이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플러스 요인을 늘리고 마이너스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요인을 강화하기가 힘들면 마이너스 요인이라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사립대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과 관련된 모

든 난제들이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난맥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교육부의 부처별 조정체계 결여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열린 학교, 열린 대학, 평생교육강화 및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 자유주의적 원칙으로 밀어붙인 교육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극심하게 왜곡된 고등교육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정원 정책을 재고하고,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재조정하며,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 각종 대학설립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립-사립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분담을 제대로 추진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원정책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방대학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교육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교육부가 인식하여야 한다. [21]

참고문헌

- 구본급(2001). "지방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동의 활성화 방안."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 교육인적자원부(1993). 『Internationalization, OECD 주요사업』.
- 교육인적자원부(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 김대유(1997). "지방중심의 경제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영주상공회의소.

김운희(1996). 『새로운 대학, 新경영방안을 찾아서』. 대학기획관리자협회.

김운희(1997). "교육개혁 개념 확대를 위한 연구보고서." 동양대학교.

김운희(2000). "비대도시권 고등교육 문제의 본질과 대책." 『지역발전과 대학교육』.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김효겸(1999).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대학교육』. Vol.9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3~4월호.

노순규(1997). 『지방화시대 기업 역할』. 서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동양대학교(2003). 새정부 지방대학 육성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박재규(1996). "사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유민주연합정책위원회.

부구욱(2002). "대학입학정원 감축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방대학 위기 해소 방안." 새 정부 지방대학 육성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동양대학교.

성기태(2003).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방향." 새 정부 지방대학 육성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동양대학교.

이동규(1991). "대학제정의 합리적 배분과 관리." 『대학교육』. 통권 49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동규(1995). 『대학 경영의 위기』. 서울: 선학사.

이장재(1997). 『대학연구의 현황과 미래』.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영섭(2003). "새정부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방향의 모색." 새정부 지방대학육성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동양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지역우수대학 육성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1997). 지역균형개발과 개발촉진지구 개발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최성해

Baptist College & Seminary of Washington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미국 필라델피아 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사단법인 산업제어기술원 이사장과 동양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교육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교수평가와 연봉제』 등이 있다.